

대법원 2018도7751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이기택)은 2018. 8. 1.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. 6. 4.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○○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,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피고인의 공천헌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도7751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■ 사안의 내용

- 피고인은 2002. 7. 1. 남양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2008. 7. 1. ~ 2010. 6. 30. 남양주시의회 의장직 역임함
- 피고인은 2014. 6. 4.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,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던 이○○ 의원으로부터 그의 보좌관인 김○○를 통해 공천헌금 5억 원을 요구받고, 총 5회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5억 5,500만 원을 교부하였음
-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5억 5,500만 원을 기부하였음

■ 소송 경과

- 제1심 - 유죄,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 선고
 - 피고인은 제1심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. 피고인만 항소
- 원심 -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
 -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만 주장
- 피고인 상고 제기
 - 피고인은 유·무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 공소사실인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(제32조 제1호: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 금지)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(제47조의2: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)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유죄라고 전제한 다음 이를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

2. 대법원의 판단

- ▣ 실질적으로 부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함
- ▣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(=공천헌금)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없음
- ▣ 참고로 이○○은 2018. 7. 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사건에서 본건 관련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,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상태임

3. 판결의 의의

- ▣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외에 기소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이 선고한 형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확인한 사례임